

“청목회 수사 ‘대포폰’ 은폐용 아닌가”

야5당, 한미 FTA비준 공동 저지

손학규 “G20 이후 국민과 반대투쟁 하겠다”

민주당, 국회 긴급현안질문서 검찰 질타

與 “대단히 유감”... 이귀남 “靑 개입 없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10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실시된 압수수색의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 모두 검찰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을 쏟아낸 가운데 한나라당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도를 조절한 반면 야당은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경권 의원은 “G20 정상회의를 목적인 둔 시점에서 검찰이 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한 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또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비자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치외법권의 성역을 만들었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청원경찰법 대표 발의자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 1명이 받는 월급은 89만5천원이다. 29년을 일해도 198만원”이라며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청원경찰법은 내용에서도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 이를 대가상으로 몰고 간다면 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정치학자들은 활성화를 연구하는데 검찰은 기적 어렵게 정착해 가는 제도를 파괴하고 있고, 국민의 후원 제도마저도 검은 돈을 만지는 일처럼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약자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정치참여 기회마저도 짓밟음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창 의원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이뤄졌고 대포폰과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파괴장치) 등을 통한 은폐가 시도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희덕 의원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인멸 사건은 정권을 통해 내용을 수도 있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수사 방해 범죄”라며 “국민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하지 않은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역의원이 압수수색 그것도 대정부질문 중에 마치 범죄집단 압수수색 하듯 검찰이 국회의원 299명 전체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는 3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고 침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수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목회 수사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질문에 “별개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FTA 실무 협의를 ‘퍼주기 재협상’으로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을 공동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 발표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5당은 일단 협상 내용이 바뀐 만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비준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민주당은 원내에서 ‘졸속·밀실·양보협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장외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규탄대회를 통한 여론전을 벌이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정부의 양보가 부각되면서 ‘FTA 재협상’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산물인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한 부담을 벗겨 준 것도 강경 기조에 힘을 실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

는 이날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FTA가 끝내 밀실에서 일방적 양보로 (한미 간) 균형을 깬다면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이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해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었다면 국가적 망신이자 제국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며 파병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與 지도부 ‘민간인 불법사찰’ 총돌

DJ 차남 김홍업 5·18보상 받는다

정두언 “檢·政 하는 일 국민 농락 수준”

안상수 “모독적 발언... 신중히 하라”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10일 “요즘 검찰과 정부가 하는 일이 거의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라고 이명박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다며 안상수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작심한 듯한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안 대표는 “발언을 신중히 하라”며 반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어느 일간지 칼럼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요즘 검찰이, 정부가 하는 일이 거의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다”며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가 거론한 칼럼은 검찰의 총리실 불법사찰에 대한 축소·은폐를 질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는 또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면서 “몇 차례 말했지만 세상에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문제는 정부가 적당히 넘어가는 것의 대가를 주로 한나라당이 고스란히 치른다는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그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상수 대표에 대해서도 “전 당대회 이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란 말을 모두가 했다”며 “처음에는 그렇

게 가듯하다가 다시 당 중심의 국정운영은커녕 당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당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총선·대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하기 전에 당원들이 지금 이런 식의 지도부를 다시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우리 지도부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잘하고 있는지, 재집권 의지가 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안 대표는 화난 목소리로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며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발언은 우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니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잘못하면 국민이 착각한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국회의원(61)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시청에서 6차 보상심의를 갖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5·18 보상을 신청한 김 전 의원을 5·18 관련자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980년 5월17일 신군부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13일 석방될 때까지 구타 등을 당했다며 5·18 보상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의 형인 김홍업 전 국회의원도 3차 보상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받아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5·18 관련자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보상심의위는 재심 탈락자 442명 가운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재제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윤현식기자 chad01@kwangju.co.kr

인권위 조국 위원도 사퇴... 졸사퇴 조짐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 사퇴 파문으로 내용을 겪는 가운데 조국(45) 비상임위원도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뒤 조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이어 다른 일부 위원도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원들의 ‘졸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위원은 10일 오전 배포한 사직서를 통해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전인 10일 자로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어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연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인권위를 창설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행동은 10일 광주 동구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의 변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의 파행적인 인권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복구이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데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